

비상경제장관회의

23-16-1

(공개)

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

2023. 7. 12.

관 계 부 처 합 동

순 서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I. 추진배경 | 1 |
| ※ 제1차 빈일자리 해소방안 주요 추진실적 | 2 |
| II. 추진방향 | 3 |
| III. 업종별 빈일자리 해소방안 | 4 |
| 1. 건설업(해외건설업) | 4 |
| 2. 해운업 | 6 |
| 3. 수산업 | 8 |
| 4. 자원순환업 | 10 |
| 5. 기존 6개 업종 보완과제 | 12 |
| IV. 빈일자리 해소 인프라 확충 | 14 |
| 1. 근로조건 개선 | 14 |
| 2. 매칭지원 강화 | 14 |
| 3. 외국인력 확충 | 15 |
| V. 향후 추진계획 | 15 |

I. 추진배경

- 빈일자리 해소를 통한 고용 모멘텀 유지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 「빈일자리 해소방안*」 발표 (3.8., 비상경제장관회의), 세부과제 추진 중

* 6개 업종별 대응 + 고용서비스 확충, 외국인력 신속도입, 중소기업 근로여건 개선
↳ 6개 업종: 제조업(조선·뿌리), 물류·운송, 보건복지(노인돌봄), 음식점업, 농업, 해외건설

- '23.5월 빈일자리 수는 21.4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.1만명 감소했으나, 코로나19 이전('19년 17.8만명) 대비 높은 수준

* 빈일자리수/증감(전년동월비, 만명): ('22.10)21.3/2.2 (11)20.4/1.7 (12)21.5/1.8
('23.1)18.4/△2.2 (2)21.5/△0.5 (3)21.3/△0.7 (4)21.6/△0.4 (5)21.4/△1.1
↳ 빈일자리: 현재 구인활동을 하고 있으며, 한달 이내 일이 시작될 수 있는 일자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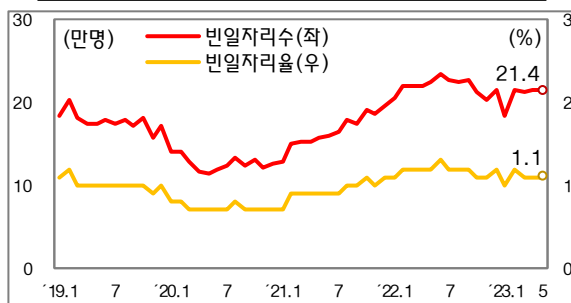
- 업종별로는 제조업, 건설업 등은 빈일자리 수가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나, 현장에서는 여전히 구인애로 호소

* 업종별 증감(전년동월비, 만명): (제조)△1.2 (건설)△0.4 (보건복지)0.2 (운수창고)0.5 (숙박음식)0.6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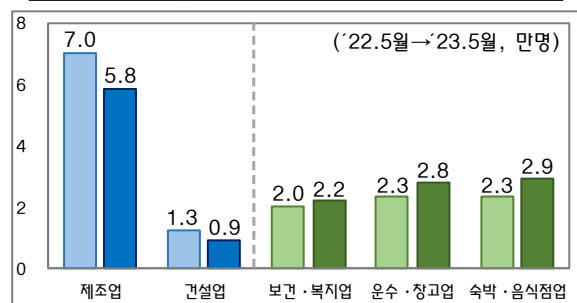
- 건설·해운·수산·자원순환업 등은 인력부족 해소요구가 크고, 향후에도 구인난 심화가 예상되는 업종

* (건설) 청년층 유입 감소 등으로 현장 인력부족 호소 ↑
(해운) 신규입직부족, 고령화(60세이상 44%) 등 국적선원수 지난 5년간 약 9% ↓
(수산·자원순환)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력부족 심화

<빈일자리수 및 빈일자리율 추이>



<5월 주요 업종별 빈일자리수 변화>



- ◇ 현장의 요구가 큰 **건설업, 해운업, 수산업, 자원순환업**을 추가 업종으로 선정하고, 업종별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

- ◇ 既 지원방안을 마련한 **6개 업종**에도 구인난이 지속되고 있는바, **현장 수요에 기반한 체감형 정책과제 발굴·보완** 추진

※ 「제1차 빈일자리 해소방안 (3.8일)」 주요 추진실적

□ [업종별 지원] 업종별 인력유입·매칭 지원 등 차질없이 추진 중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조선업 [산업부]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조선업 희망공제(입직자) 지원대상 1,409명 선정(6.9일 현재) ▶ 외국 인력 5,033명(E-7: 3,184명, E-9: 1,849명) 공급(1분기) ▶ 원청 연수원 활용 협력사 채용예정자 훈련(671명 수료)·채용연계(509명) ▶ E-9 '조선업 별도 쿼터' 5천명 신설(4월) |
| 뿌리산업 [산업부]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'일하기 좋은 뿌리기업' 선정 평가(6월~, 74개사 지원) ▶ 숙련기능인력 비자(E-9 → E-7-4) 137명 전환 완료(올해 쿼터 400명) |
| 물류운송업 [국토부]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(택시) 대형차 전환(인가제→신고제) 위한 시행규칙 개정(4월) ▶ (물류) 자동화 기술개발 모듈개발 완료 및 시범운영 실시(4월) ▶ (버스) 운전자격 취득지원 정상 추진(6월, 2천여명) |
| 보건복지업 [복지부]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요양보호사 교육체계 법규 개정, 승급제 시범사업 추진 중('23.4월~) ▶ '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인력수급방안' 마련 중 |
| 음식점업 [농식품부]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외식산업 인력난 해결 분야 R&D 과제 선정(3곳, 3월) ▶ 재외동포(F-4) 음식점업 취업허용 위한 고시개정 완료(5.1.~, 법무부) ▶ 유학생(D-2) 주중 취업시간 연장(7.3일, 법무부 지침개정) |
| 농업 [농식품부]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농촌인력증개 연인원 160.2만명 실적(6월말, 전년동기비 26%↑) ▶ 외국인력 6월말까지 2.4만명 입국(전년동기비 162%↑) ▶ 숙련기능인력 비자(E-9 → E-7-4) 198명 전환 완료(6월말 기준) ▶ 계절근로자(E-8) 체류기간 연장(5→8개월 이내, 6.30~) |
| 해외건설 [국토부]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마이스터고 해외연수·해외실습 계획인원 협의(3월, 70명) ▶ 중소·중견기업 대상으로 해외건설 현장훈련(om) 참여 청년 선정('22년 19명→'23년 30명) ▶ 해외 청년인턴 파견 참여 공기업(7개기관) MOU 체결(6.20, 16명 파견) |





□ [빈일자리 해소 인프라 확충] 고용서비스 확충, 외국인력 공급 확대 등 병행

| | |
|--------------|--|
| 근로조건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납품대금연동제 '지원에 관한 사항'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(7.4일) ▶ 대·중소 상생일자리 790명 교육중(6월) → 500명 채용예정(9월) ▶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선정공고·접수(5~6월) → 선정(9월, 280개사내외) |
| 고용서비스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「신속취업지원TF」로 1.7만명 채용지원('22.8~'23.6.14, 전년비 12.9%↑) ▶ '구직자·기업 도약보장 패키지' 운영센터 조기 확대(4월) |
| 인력양성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직업계고 경력개발 시범사업 훈련 실시(3월~, 100여명) ▶ '미래유망분야 인력양성 사업' 학과·훈련기관 선정 완료(3월) |
| 외국인력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'23년 E-9 쿼터 11만명 중 6월말 6.8만명(62%) 고용허가서 발급 완료 ▶ '23년 숙련기능인력(E-7-4) 5천명 조기선발 완료(~7월) |

II. 추진방향

빈일자리·구인난 해소 → 고용모멘텀 유지

신규 인력부족 심각 '4개업종'별 맞춤형 지원

| | | |
|--|--|-----|
|  건설업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편의시설 설치기준(샤워·탈의 등) 마련, 적용·확산 ▶ 건설기능인등급제 기반 교육 확대, 인력매칭 지원 | 국토부 |
|  해운업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승선기간·유급휴가일 개선, 외항·원양 선원 근로소득 비과세 확대 ▶ 우수 외국인 장학생 유치, 외국인력 인권보장 강화 | 해수부 |
|  수산업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'어선원보험' 의무화, 노후 위판장 현대화 지원 ▶ 외국인력 쿼터 확대 검토, 복지회관 조성 | 해수부 |
|  자원 순환업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폐기물 공공선별장 현대화·자동화 지원 ▶ 산업계 수요 맞춤형 재직자 교육 강화, 고급인력 양성 | 환경부 |

보완 현장요구 기반 '기존 6개업종' 추가 과제

| | | | | | |
|--|-----|---|------|---|------|
| 조선업 | 산업부 | 부리산업 | 산업부 | 물류·운송업 | 국토부 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'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' 구체화 등 격차해소 지원 ▶ 외국인력 신속도입 지원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여성친화형 근로시간 유연화 지원 ▶ '부리명장센터' 운영, '도약센터' 신설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'특별고용업종' 지정기간 연장·지원 ▶ '버스·터미널 지속가능 기반조성 방안' 마련 | |
| 보건·복지업 | 복지부 | 음식점업 | 농식품부 | 농업 | 농식품부 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'요양보호사 승급제' 확대 추진 ▶ '처우개선 및 인력수급 방안' 마련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연계 매칭 지원 ▶ '푸드테크 산업 육성법' 제정 추진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체류형 영농작업반 확대 ▶ '농어업 고용인력 지원특별법' 시행 | |

중소기업
근로여건
개선

+

수요자 관점
일자리 매칭
강화

+

외국인력
도입확대 및
관리시스템
확충

Ⅲ. 업종별 빈일자리 해소방안

1. 건설업

※ '국내 건설업'(신규)과 '해외 건설업'(「1차 대책」) 통합

❖ 국내 건설현장은 고되고 위험한 근로환경 등에 따라 **청년층 중심으로 취업기피 현상** 발생 → **인력 부족*** 및 **고령화**** 지속

* 건설업종사자 1,471.0천명, 빈일자리 9.4천명, 빈일자리율 0.6%(‘23.5)

** 건설업 평균연령 51.4세, 40대 이상 83.9%(전산업 평균 66.5%)(‘23.5)

○ 해외건설은 **청년특화 OJT***, **특별공급 지원****〈「1차 대책」 과제〉 등 **차질없이 추진중이나, 일자리 정보제공 시스템 미흡 등 현장애로 호소**

* 청년 인력양성을 위해 청년층 우선으로 현장훈련(OJT) 지원기업 선정·지원(‘23.6~)

** 국외근로자 민영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확대(해외파견 근로자 포함)로 인력유입 유도

① 근로조건 개선

건설현장 편의시설 설치기준 확산, 안전관리 시스템 확충

○ 건설현장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편의시설 설치기준*을 마련(‘23.下)하여 관련 공공기관 우선 적용**, 민간 확산 추진

* 고층아파트 등 건설공사시 간이화장실 설치방안 검토, 근로자 복지시설 개선방안 등

** 유사기준 LH 발주 현장에서 시행 중 →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우선 적용 추진

○ 스마트 기술·장비 활용*한 건설현장 근로조건 개선 지원** 강화

* 건설현장에 적합한 스마트 안전장비 표준모델 구축 및 평가 기준 개발(~’23.11)

** 지능형 CCTV 등 스마트 장비 보급 확대(‘22년 25→’23년 50개소) 등 추진

○ 자율적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「건설안전 로드맵」 마련·발표(‘23.10월)

건설안전 로드맵 주요내용

| | |
|-----|--|
| 예 방 | ▶ 각 건설주체 참여를 통해 현장수용성 있는 예방체계 구축 |
| 대 비 | ▶ 건설안전활동 디지털화 등 스마트한 건설안전관리시스템 구축 |
| 대 응 | ▶ 골든타임내 대응 위해 선조치 후보고 체계 마련, 역량강화 등 추진 |
| 복 구 | ▶ 책임소재 명확화, 재발방지 노력 강화 등 |

② 매칭지원 강화

건설기능인 등급 맞춤형 서비스, 해외건설 일자리 서비스 운영

- 건설기능인 등급*에 기반하여 교육이력 관리, 인력매칭** 등이 개인맞춤형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련 시스템 개선 추진('24)

* 현장경력, 자격, 포상이력 등을 종합하여 초·중·고·특급의 4단계 등급 부여

** 건설일드림넷 구인·구직 시 직종별 기능인등급 표기 → 구인·구직자 상호 연결

- 해외건설 분야 매칭지원을 위해 취업사이트(건설위커) 연계·활용, 채용·인재정보, 취업뉴스 등 다양한 취업서비스 제공*('23.下)

* '23.7월 중 정식 운영하는 '해외건설통합정보서비스'(OCIS, <https://ocis.go.kr>) 활용

③ 인력양성 등

청년 건설인력 양성, 기능인등급제 연계 교육

- 특성화고 학생을 대상으로 직업훈련* 후 기업에서 3개월간 OJT 및 채용하는 '건설 뉴 마이스터 훈련사업' 실시

* 현장과 유사한 실습장에서 기초·실습·응용·안전교육 등 실시(420~480시간)

- 군장병 전역예정자 중 건설업 경력·희망자 등 대상 훈련 제공

- 숙련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건설기능인등급제 연계 교육* 확대('22년 6 → '23년 12개 직종) 및 '숙련기능인력 배치 시범사업' 확대**

* 기능공 육성을 위해 직종별·수준별 맞춤형 교과과정 운영

** 경기도 10개 현장('21년~), 서울시 50개 현장('23년~) 대상 실시

④ 외국인력 공급

고용제한 처분 기준 개편 등 외국인력 공급 확대 추진

- 건설업 특성 반영, 단순외국인력(E-9) 고용제한 사유(예시: 임금체불) 발생시 고용제한 처분단위를 「사업주 → 당해 사업장」으로 변경하고,

* 고용제한을 현장단위가 아닌 사업주 단위로 처분하여 사업주의 다른 현장까지도 외국인을 고용하지 못하는 문제 해소

- 고용제한 처분기간도 합리적으로 조정*('23.7~)

* 「외국인고용법」 제20조제1항제1호 최초 적발 시 고용제한 2년 → 1년으로 조정

- ☞ 규제 개선을 통해 합법적 외국인력 고용여건 조성 → 쿼터 활용(탄력배정분) 등을 통한 건설현장 인력수급 원활화 지원 지속

2. 해운업

❖ 최근 국적선원 인력은 전세계적 해기사 수요 급증, 장기간 승선 및 장시간 근로 등으로 인해 '00년 이후 지속 감소 중

* 국적선원수(만명) : ('00년) 5.9 → ('10년) 3.9 → ('22년) 3.2

○ 특히 과거 고소득·전문직으로서의 위상이 저하됨에 따라, 이직률이 높아(5년내 이직률 78%) **중급자 이하 선원 부족현상 심화**

○ 現 선원충원 부족현상 지속시, 10년 뒤 외항상선 절반 이상* 운항 차질 우려, **내항상선 선원 고령화**는 외항상선보다 심각**

* '32년에는 외항상선 1,541척(예상) 중 643척만 원활 운항 가능(해기사협회, '22년)

** 전체 선원 고령화율(60세 이상 비중) 약 44%, 내항상선은 약 60% 수준

① 근로조건 개선

근로환경 개선 위한 제도 개선, 복지 지원 강화 등

○ 외항상선 승선기간·유급휴가일 개선(단체협약 사항) 위한 노사정 협의 추진('23.下~)

* (유럽) 3개월 승선(최대 4개월)·3개월 휴가 / (韓) 6개월 승선(최대 1년)·2개월 휴가

○ 일반근로자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「선원법」에 규정

| 구분 | 현재 | 개선(안) |
|---------|--|--|
| 직장내 괴롭힘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범죄행위외 직장내 괴롭힘 발생시 법적 조치 불가 신고 및 고충 상담 채널 부재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선사 조치의무 발생 및 위반시 벌칙 부과 전용 모바일 상담창구 신설 |
| 체불 임금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수급권 양도·압류·담보제공 가능 대상에 출산휴가 급여 제외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양도·압류·담보제공 금지 등 출산휴가 급여 포함 |
| 구제 명령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선원노동위원회 구제명령 이행강제 수단 부재 → 분쟁 장기화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3천만원 이하 이행강제금 신설 |

○ 외항상선·원양어선 선원의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(현 월 300만원)을 확대하여 선원의 실질소득 증대에 기여

○ 해기면허 보유자 등 전문직군에 대해 선사 자체재원 등을 활용한 공제제도* 신설 추진

* 퇴직연금, 적립형 공제 등 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영, 일상 복지 프로그램 운영 등

○ 초급·청년 내항선원 대상 적립형 공제 도입안을 연구(~'11월)하고, 업계(한국해운조합), 관계부처·지자체 등과 함께 시행 방안 논의

- **톤세제 절감액을 활용***, 국적선원 고용장려 및 복지 확대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한 **'(가칭)선원발전기금'** 조성 추진
 - * 톤세제 적용을 통한 법인세 절감액 : 최근 5년('17~'21) 기준 연평균 약 3,700억원
- **외항상선 인터넷 이용환경을 개선***하고, 해상 원격의료에 위한 **장비설치 지원 확대**('23년 140척) 추진
 - * 해외 주요 선사는 선원유치 일환으로 초고속 해상 통신망(Starlink) 등 도입
- **내국인 고용을 유도하는 국가필수선박*** 지원 확대 검토
 - *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시 외국인 선원 고용이 6명으로 제한(이외는 8명)되며. 정부는 이로 인한 추가 임금부담(2명)을 선사에 보상

2 인력양성 등

해기인력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, 실습선 신규 건조 등

- **해상-육상 근무를 유연하게 전환**하며 승선경력 유지, 경력단절 선원의 승선복귀 지원 등을 통해 **해기인력 통합관리*** 추진
 - * (현재) 해기면허 소지자가 일정기간 승선하지 않을 경우 해기면허 정지 (개선) 장기 육상근무시에도 해기면허 유지 → 선원 인력보충 원활화
- 산업계 수요 맞춤형 **교육기관**(해사高·오션폴리텍) **운항 실습*** 확대, 선박교육을 위한 **상선 실습선 및 어선 실습선 신규 건조**
 - * (해사高) 국내항 운항 → 원양항해(중국·일본·대만 등) 시행('23~) (오션폴리텍) 3개월 → 5개월(상선 3급과정), 1개월 → 3.5개월(상선 5급과정)
- **해양대 등을 졸업한 항해사(고급인력)에 대해 생애주기별 경력경로 개선***을 통해 **장기근속 유도 지원**
 - * 선·기관장 승진연수 단축 및 이후 승선근무 - 육상직 수시 전환 허용 등

3 외국인력 공급

교육 지원, 인권보장 강화 등 통해 외국인 선원 확보

- **해외 양성기관 - 국내 교육기관 연계*** 등을 통한 **우수 외국인 장학생 유치** 등 세계적 해기사 부족현상 적극 대응
 - * 주요 선원 공급국 교육기관(필리핀·미얀마 등) - 한국해양대·목포해양대 등
- E-10 외국인력 **인권보장**을 위해 **송입업체 불법행위**(인권침해 등) 적발시 등록 제외, 노사정 및 인권단체 **합동점검** 등 추진

3. 수산업

❖ 높은 노동강도, 위험한 업무 등 **열악한 작업환경**과 청년층 등의
어촌거주 기피현상 등에 따라 인력난 심화

* 어업분야 취업자수(만명, 하반기 기준): ('18)7.2 ('19)7.1 ('20)7.6 ('21)8.0 ('22)7.3

○ 특히, 영세업체 중심의 **유통·가공업**은 열악한 근로조건

* 중소기업체 평균 10.5명이 근무, 수산물 손질·분류 등 고강도 작업 수행

① 근로조건 개선

어선원보험 의무화, 어선·작업장 현대화

○ 어선원 안전·복지 개선을 위해 모든 어선*의 어선원보험 가입
의무화 추진('24, 「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」 시행령 개정)

* ('23) 3톤 이상 어선 → ('25) 쏘 어선

○ 어선원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·보건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
「어선안전조업법」 개정 추진('23)

<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 주요내용 >

▶ 어선작업 및 위생기준 등 어선원 안전·보건 고시 근거 마련

▶ 선내 안전·보건 유해 요인 파악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

▶ 어선원의 안전·보건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어선안전감독관 도입 등

○ 수산 유통·도매 근로자 작업환경 개선 위해 **노후한 위판장**
(경매·유통·보관 등 시행) **현대화*** 지원 강화('23년 6개소)

* 예시: (하역·운반작업) 손수레 → 지게차, (위판품목 선별) 수작업 → 자동선별기

○ 안전복지형 어선 건조 시 선내 복지공간 개선·확충을 위해
복원성·화재 등 안전기준 강화

* 조리실, 휴게실, 욕실, 안전조업 준비에 필요한 장소를 선박의 하부가 아닌
최상층의 갑판부에 설치토록 하고, 총톤수(제한) 산정에서 제외 등

○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(~'27, 6개소) 등 통해 AI·빅데이터
기반의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고, 근로자 직무전환* 등 지원

* 재직자 대상 신기술·장비 운영기술 교육지원, 수산계高 현장실습·취업 연계 등

② 매칭지원 강화

도시-어촌간 매칭 강화 및 지역내 채용 지원

- 수산물 단순가공 등 어촌 현장 구인수요 파악, 관계기관
협업체계 구축 등을 통해 도시-어촌 간 인력연계* 추진('24.~)
- * '어업인일자리지원센터'(어촌, 9개)와 '일자리지원센터'(도시, 102개) 간 협력 강화
- 「2023 부산국제수산엑스포」('23.11) 등 박람회·지역축제 등에
일자리 부스를 설치하여, 지역내 구인·구직 활동 지원 강화

③ 인력양성 등

후계·청년어업인 육성, 수산기술 인재양성 지원 강화

- 청년어업인 육성 목표달성 위해(~'27년 4천명) 수산계高
승선실습 개선*, 블루푸드테크 산·학 연계과정 신설** 등 검토
- * 수산계고교 승선학과(7개교) 승선실습을 '해양수산연수원'으로 일원화('26~)
- ** 수산계대학 대상 블루푸드테크 전문교육기관 지정 검토
- 후계·청년어업인을 대상으로 '기반 마련 - 창업 - 정착단계'에
이르는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·운영
- * (기반마련) 어선청년임대, (경영지원)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,
(어촌정착) 어촌신활력증진사업, 귀어자금·청년어촌정착지원 등

④ 외국인력 공급

외국인 쿼터 지속 확대 및 어촌 적응 지원 강화

- 어업인 단순외국인력(E-9), 계절근로자(E-8) '24년 쿼터 확대 검토
- * '23년 어업 외국인력 쿼터(명): (E-9) 7,000 (E-8) 5,043
- 어업분야 외국인력의 원활한 적응을 위한 외국인 어업근로자
복지회관(7개소 既운영, 2개소 건립 중) 조성
- * 현재('10년~): 강원 6, 경북 1 / 신설 예정(~'23년): 강원 1, 경북 1

4. 자원순환업

❖ 자원순환분야 급성장*으로 필요인력 수요는 증가하나, 기술개발 등 전문인력 부족**, 수거·선별·재활용 분야 등 단순인력은 기피현상 심화

* 국내 폐기물 처리업 시장규모(조원): ('15) 13.5 ('19) 17.4 ('25 전망) 23.7

** '21년 구직인원 1.9만명 중 채용인원은 1.6만명(미채용률 15.4%)

○ 특히, 50세 이상 근로자 비중이 높아 향후 인력부족 심화 예상

* (30대 이하) 20.3%, (40대) 34.6%, (50대) 28.3%, (60대 이상) 16.8%

① 근로조건 개선

미래형 산업단지 조성, 영세업체 근로환경 개선

○ 기술개발, 실증·생산·판로 등을 종합 지원하는 '지역별 거점 클러스터'를 구축하여 쏠주기 지원 → 지역 일자리와 연계

- 지역청년 등 인재유입 유도를 위해 지역별 유망분야에 대해 자동화·집적화된 미래형 산업단지 구축 지속 추진

< '지역별 거점 클러스터' 조성사업 현황 >

| 구분 | 전기차 폐배터리(포항) | Post 플라스틱(부산) | 자원순환(제주) |
|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기간 | '21~'25년 | '21~'26년 | '22~'28년 |
| 목적 |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고도화 | 페플라스틱 고부가가치 재활용 | 페플라스틱·폐배터리 등 고부가가치 재활용 |

○ 폐기물 공공선별장에 대해 신규시설로 교체, 현대화·자동화(手작업 → AI·광학 선별) 등 작업환경 개선 추진

* 공공선별장(184개) 현대화(手 선별 → AI 및 광학선별): '23년 31% → '26년 63%

○ 영세 환경업체 대상으로 노후시설 현대화를 지원하는 '근로환경개선금' 지원범위 확대* 추진

* (현재) 편의시설 설치, 노후시설 현대화 → (개선) 안전시설 확충까지 지원

○ 의료폐기물 관련 현장근로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자율주행 로봇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및 현장적용 추진(~'24년)

* 「감염우려 의료폐기물 처리 기술개발사업(R&D)」 추진 중

② 매칭지원 강화

온라인 서비스 제공 및 대학연계, 인력수급 관리

- 온라인 구인구직 게시판* 연중 상시운영을 통해 자원순환분야 취업정보 및 온라인 매칭서비스 제공(화상면접 상시 지원)
* 환경일자리 박람회 공식 누리집(<http://ecojobfair.com>) 활용, 92개사 참여
- 창업·벤처녹색융합클러스터(인천 소재) 입주기업*과 협약대학 연계를 통해 청년 취업 기회 확대
* 연 매출 1억원 이상, 5인 이상 고용 녹색산업체(33개사)
- 자원순환분야 인력 현황 정기조사 및 통계기반 구축 등을 통해 '자원순환 업종별 인력수급 관리' 추진

③ 인력양성 등

전문인력 양성과정 확충, 재직자 교육 강화

- 재직자 대상 산업계 수요맞춤형 역량교육 실시('23, 180명) 및 디지털 교육 강화*, 교과개방 확대** 등 지속 추진
* 자원순환분야 인력 양성과정에 디지털 기술 이해 및 활용 교육과정 확대
** 폐자원·환경에너지, 탈플라스틱 등 필요교과 세미나·특강 등('24년~)
- 산업계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여 재직자 교육과정 다변화* 및 단계별 교육** 실시('23)
* 선별시설 자동화 운영, 고부가가치 재활용 전환,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등
** (개선) 일반/전문 단계별 교육 실시로 교육생 접근성 및 교육효과 제고
- 석박사급 고급인력양성을 위해 특성화대학원* 운영('23, 160명)
* 폐자원·환경에너지, 탈플라스틱 등('24년 폐배터리 재활용 분야 확대 추진)

④ 외국인력 공급

폐기물 분류 업무 등에 외국인력 활용 확대

- 폐기물 수집·운반·처리 등의 상·하차 직종 및 폐기물 분류 업무에 단순외국인력(E-9) 활용* 확산 지원
* '22.12월, '외국인력정책위원회' 통해 E-9 고용허용 신규 결정
- ⇒ 지자체 등 중심으로 사업장 대상 안내·홍보 등을 통해 현장에서의 외국인력 인력수급 원활화 지원

5. 기존 6개 업종 보완과제

❖ **업종별 부처 책임관** 중심으로 「제1차 빈일자리 해소방안(3.8)」의
현장 이행상황 점검·애로사항 파악 → **추가 보완과제 발굴**

제조업 (조선업·뿌리산업)

- **[조선업]** 원하청 실태조사*·격차해소 지원, 기성금 개선 등
「조선업 원하청 상생협약(2.27)」 후속조치 차질없이 추진
* 원청 5사·사내협력사 500여개 대상 임금·복지수준, 물량·외국인력 현황 등(7월~)
- 외국인력(E-7, E-9 등) 확충 지원 및 원청·자치단체 협의를 통해
「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」 대상·규모, 운영방식 구체화('24년 신설)



■ 조선업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입직자에 대한 지원 뿐 아니라 재직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.(조선업 고용활성화 워크숍, '23.4월)

- **[뿌리산업]** 뿌리산업 특화 일자리 매칭 서비스 제공을 위해
지자체를 중심으로 「뿌리산업 도약센터」 신설·운영 추진('24~)
- 경력단절 여성 등 유휴인력 활용 확산을 위해 근로시간
유연화* 지원('24~)
- * 지자체 협업·지원, 간접노무비(월60만원×6개월), 교통비(월10만원×6개월) 등
- 디지털 뿌리명장 센터 운영을 통한 숙련인력의 양성·공급 강화



■ 열악한 근로환경 때문에 청년들은 지원조차 하지 않고요, 입사하더라도 하루이틀만에 퇴사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.(금형업계 간담회, '23.5월)

물류·운송

- 시외버스·택시운송업 **특별고용지원업종*** 지정기간 연장('23.7~12)에
따른 사업주·근로자 지원 확대
* 지원내용: 사업주 훈련 지원한도 확대, 국민내일배움카드 자부담률 인하 등
- 버스·터미널 지속가능기반 조성방안 논의·마련('23.下)



■ 업계사정이 점차 나아지고는 있지만, 코로나19 이전 대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는 등 운송업계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.(운송사업연합회, '23.5월)

보건 · 복지

- **요양보호사 승급제 확대**를 위해 既 시행 **시범사업***('23.4~)의 **효과성 분석**('23.10~) 및 **보수교육 의무화 안착** 추진(시범사업, '23.8~)

* 시설규모에 따라 최대 8인 배치, 요양보호사(실습생) 교육지도, 고충 상담 등 업무 부여

- **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인력수급방안*** 마련('23.10)

* (예시) 직무분석을 통한 업무강도 및 인력수급 취약지 배려, 대체인력 지원 등



▪ 업무강도는 높는데 근속년수에 상관없이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에 경력도 인정되지 않아 장기근속 할 이유가 없어요.(장기요양기관 방문, '23.4월)

음식점업

- **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연계 일자리 매칭 프로그램*** 신설('23.10)

*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(서울, 10.5~7 등) 연계 채용상담회 신설 추진 중

- **로봇 도입·활용 지원 등 「푸드테크 산업 육성법」 제정*** 추진('23.下)

* 로봇 도입을 통한 인력부족문제 해소, 외식 경쟁력 강화 지원근거 마련 등



▪ 외식산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다각적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. (프랜차이즈협회 간담회, '23.4월)

농업

- **체류형 영농작업반**을 지속 확대하여 **농번기 인력부족 대응 강화**

* (22년) 20개반, 연인원 2만명 수준 → ('23년) 30개반, 연인원 3만명

- 「**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**」 시행('24.2) 등 **근로환경** 지원 강화

* 주요 내용 : 인력지원센터 설치, 실태조사, 중장기 인력 지원계획 수립 등



▪ 농번기에 집중적으로 인력공급이 가능한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이 효과적인데, 체류기간이 짧아 다시 구인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어요.(전북, '23.5월)

IV. 빈일자리 해소 인프라 확충

① 근로조건 개선

중소기업 조직문화 지원사업 강화, 제도 개선

- 중소기업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 일자리평가제도를 법제화*하고, 유연근무 등 자녀양육제도 활용기업 우대지원** 추진
 - * 중소기업인력법에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관련 조항 신설 및 관련 규정 개정
 - ** (현행) 중소기업 지원사업 선정시 '고용창출' 여부를 중심으로 가점
→ (개선) 자녀양육제도 관련 지표(유연근무, 출산휴가·육아휴직 등)에 가점 항목 신설
- 청년채용 중소기업 등 대상으로 CEO 교육 등 청년친화적 조직문화 개선 및 취업 청년의 초기 직장적응 지원사업 신설('24년)
- 조직문화 컨설팅 지원 강화 등 중소기업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 효율화 추진('24년)
 - * 일터혁신 지원('23년 280억원) : 임금체계·장시간 근로·작업환경 개선 등 컨설팅 수행
근로조건자율개선 지원('23년 20억원) : 20인 미만 사업장의 법준수 점검자율개선 지원

② 매칭지원 강화

수요자 관점 서비스 연계·통합, 기업 상담 지원 확충 등

- 언제 어디서나 각종 취업지원 서비스, 직업훈련, 지원금을 한곳에서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고용센터 「(가칭)고용24*」 시범오픈('23.11)
 - * 맞춤형 서비스 추천, 지원금 조화신청 등 원스톱서비스 제공, 민원인 자료제출 간소화 등
- 기업특성에 기반하여 「인력수급 진단-컨설팅-맞춤형 서비스」를 종합 제공하는 「기업 도약보장 패키지」 지원·확대('23.下)
 - * (현재) 35개센터 시범 운영 중→ ('23.下) 48개센터 전국 시행
- 구인난 해소 지원을 위해 자치단체와 협업하여 중앙정부 일자리사업에 추가(PLUS) 지원할 수 있는 맞춤형 사업 확대

| | |
|------|--|
| 조선업 | 대형 조선사 기술연수원 훈련생 훈련수당 우대지원(월20 →100만원) |
| 뿌리산업 | 여성 인력 활용을 위한 근로시간 유연화 지원(기업 간접노무비 월60만원 및 근태관리시스템, 근로자 교통비 월 10만원 및 적응교육 지원 등), 최저임금 120%이상 지급 근로자 채용기업 일도약장려금 우대(월 60만원 →100만원) |
| 농업 | 도시(관외)근로자 농가일자리 연계(영농작업 반장수당, 숙박비, 교통비 지원), 농공단지 등에 상용직 취업 알선 |

③ 외국인력 확충

공급 확대, 관리시스템 확충 등 국내 노동시장과 조화 추진

- 충분한 숙련인력 공급을 위해 하반기중 금년도 숙련기능인력(E-7-4) 쿼터 3만명 추가확대(0.5→3.5만명)하고, 비자 취득요건 완화* 추진
 - * 소득요건 하향(현재 年 2,600만원) 등
- '24년 단순외국인력(E-9) 쿼터 연내 조기결정, 쿼터 확대 검토
- 인력부족 업·직종에 대한 현장수요, 인력수급 분석 등을 통해 단순외국인력(E-9) 신규 허용업종 검토 추진
- 사업장 변경, 숙식비 관련 제도개선 등 외국인력 관리 효율화
 - 일정한 권역과 업종 내에서만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고, 공공 기숙사 도입에 적극적인 지자체에 고용허가시 우대* 추진
 - * 예시: 고용한도 상향 검토, 선발 가점 부여 등
- 외국인 유학생 활용을 위해 유학 과정 이수 후 국내 취업 활성화 방안* 수립 추진('23.下)
 - * 現) 졸업생 취업 범위 전문직군 한정 → 改) 체류자격 신설 등을 통한 취업범위 확대
 - 방학 기간 중 유학생 전문분야에서 인턴 활동 허용*('23.7)
 - * 기존) 유학생의 경우 아르바이트 수준의 단순노무분야 시간제취업만 허용

V. 향후 추진계획

- 일자리 TF, 현장점검반 등 통해 정기적으로 추진실적을 점검하고, 필요시 보완과제 마련 등 후속조치 적극 추진
-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인력수급 방안(10월), 외국인 유학생 취업활성화 방안('23.下)등 후속 정책 차질없이 마련·추진

| 주요 추진과제 | 부처·기관 | 추진 시기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|
| 1. 건설업 빈일자리 해소 | | |
| · 건설현장 작업환경 개선 편의시설 확충 | 국토부 | ‘23.下 |
| ·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장비 표준모델 구축 및 평가기준 개발 | 고용부 | ~‘23.11 |
| · 건설현장 안전사고 감축 로드맵 마련·발표 | 국토부 | ‘23.10 |
| · 국내건설 인력매칭시스템 - 워크넷 연계 | 국토부 | ‘24 |
| · 건설기능인등급제 연계 교육 직종 확대 | 국토부 | ‘23.11 |
| · 단순외국인력(E-9) 처분단위 기간조정 | 고용부 | ‘23.6.30 |
| 2. 해운업 빈일자리 해소 | | |
| · 외항선원·원양어선 선원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상향 | 기재부·해수부 | ‘23.下 |
| · 해기사 전문직군 대상 공제제도 신설 방안 마련 | 해수부 | ‘24.上 |
| · 법적 권리 확대 위한 「선원법」 개정 | 해수부 | ~‘23.12 |
| · 외항선박 초고속 해상 통신망 도입방안 발표 | 해수부 | ‘23.下 |
| · ‘선원발전기금’ 조성 | 해수부 | ~‘23.12 |
| · 친환경 신형 실습선 건조 착수 | 해수부 | ‘24.上 |
| · 외국인선원 인권 실태 민관 합동 현장 점검 | 해수부 | ‘23.下 |
| 3. 수산업 빈일자리 해소 | | |
| ·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 | 해수부 | ‘24 |
| · 어선안전조업법 개정 추진 | 해수부 | ‘23 |
| ·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| 해수부 | ~‘27 |
| · 수산물 가공 등 현장 구인수요 조사 | 해수부·지자체·수협 | ‘23 |
| · 관계기관 협업체계 구축 | 해수부·고용부·지자체 | ‘24 |
| · 수산계고 공동실습선 건조 완료 | 해수부·교육청 | ‘25 |
| · 수산계고 승선실습 해양수산연수원으로 일원화 | 해수부·교육청 | ‘26 |

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|
| 4. 자원순환업 빈일자리 해소 | | |
| · 폐기물 공공선별장 작업환경 개선사업 추진 | 환경부 | ‘23 |
| · 감염우려 의료폐기물 처리 기술개발 | 환경부 | ~‘24 |
| · 환경 일자리 채용설명회 개최(비수도권) | 환경부 | ‘23.下 |
| · 자원순환 분야 인력구조 조사·분석 | 환경부 | ‘23.下 |
| · 자원순환 재직자 교과 개방 확대 | 환경부 | ‘24 |
| · 외국인력 인력수급 원활화 지원 | 고용부 | ‘23.下 |
| 5. 기존 6개 업종 보완과제 | | |
| · 조선업 원하청 실태조사 | 고용부·산업부 | ‘23.7 |
| ·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신설 | 고용부 | ‘24 |
| · 뿌리산업 도약센터 신설·운영 추진 | 고용부 | ‘24 |
| · 버스·터미널 지속가능기반 조성방안 마련 | 국토부 | ‘23.下 |
| · 요양보호사 승급제 시범사업 및 보수교육 의무화 추진 | 복지부 | ~‘23.10 |
| ·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인력수급방안 마련 | 복지부 | ‘23.10 |
| · 푸드테크 산업 육성법 제정 추진 | 농식품부 | ‘23.下 |
| ·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연계 일자리 매칭 프로그램 신설 | 농식품부 | ‘23.10 |
| · 농어업 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 | 농식품부·해수부 | ‘24.2 |
| 6. 빈일자리 해소 인프라 확충 | | |
| · 청년 등 대상 기업환경 및 조직문화 개선 사업 추진 | 고용부 | ‘24 |
| · 중소기업 일자리평가제도 법제화 | 중기부 | ‘24.上 |
| ·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지원·확대 | 고용부 | ‘23.下 |
| · 온라인 고용센터 ‘고용24’ 시범 오픈 | 고용부 | ‘23.11 |
| · 숙련기능인력(E-7-4) 취득요건 개선 | 법무부 | ‘23.下 |
| · 단순외국인력(E-9) 차년도 쿼터 결정 | 고용부 | ‘23.下 |
| · 단순외국인력(E-9) 신규 허용업종 검토 추진 | 고용부 | ‘23.8 |
| · 외국인 유학생 취업활성화 방안 마련 | 법무부 | ‘23.下 |